

‘그린란드 집착’ 트럼프 관세 폭탄…유럽, 전면 반격

EU, 930억 유로 보복관세·‘무역 바주카포’ 반격 채비
미·유럽, 수십 년 만에 최악 국면…무역전쟁 확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약속으로 촉발된 미국·유럽 간 갈등이 대서양 무역전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방침에 맞서 유럽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 당장 2월부터 양측이 통상제재를 치고받는 악순환에 들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가 검토 중인 맞대응 수단은 크게 두 갈래로 전해졌다.

하나는 지난해 미국·EU 무역 협상 과정에서 마련했다가 보류한 930억 유로(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폐기지다.

한 EU 외교관은 미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면 보류 중이던 보복 관세가 2월 6일 자로 자동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작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협상 타결로 시행을 접은 바 있다.

다른 하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의 발동이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금이야말로 이 무기를 사용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EU 대사들이 보복 조치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

는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지난해 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유럽의 대응 방향은 정상급 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오는 22일께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복 관세든, ACI 발동이든 유럽이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수십 년 만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 보복 조치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럽 지도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지만 유럽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 속에서,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미국의 안보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 충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미 영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전쟁 역시 EU가 대미 수출과 금융·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강경한 대응과 보복 조치는 유럽의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피로 잠재운 이란 시위…사망자 1만8000명 추산

당국 통계 은폐 속 외신 “대규모”
군·민병대 거리 장악 ‘공포 통치’

이란에서 수 주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강경 진압 속에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규모를 두고 충격적인 추산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시위로 최대 1만8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주말판 선데이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시위로 사망자가 1만6500명에서 최대 1만8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란 당국이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외 언론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과 현장 영상, 사진 등을 근거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위는 지난달 말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적 불만을 계기로 출발했다. 상인들의 시위에 대학생과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란 정권은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보안군을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근 들어 시위는 겉으로는 잣아든 모습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거의 사라졌고, 당국도 학교 재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내한한 이란인들이 미국 정부의 이란 군사 개입을 촉구하며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와 인터넷 일부 복구 방침을 내놓으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 거리에 시위대 대신 군인과 친정부 민병대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나오면 죽다”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고, 바시즈 민병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테헤란의 한 의대생은 “은행 여러 곳이 불에 탔고 상점 대부분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며 “대학교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테헤란 서쪽 공업도시 카리지에서는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는

황도 목격됐다.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 역시 장갑차와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며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주요 도로마다 무장 병력이 배치된 모습이 담겼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에 돌리고 있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는 미국과 이스라엘, 해외 무장 단체들이 시위대를 선동해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시위 가담자 일부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계돼 있다며 체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란 시위대 죽는데…국경 밖에선 파티

이란 특권층 향한 분노 들끓어

한 이란인은 최근 터키예로 온 부유층 인사들에 대해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이란에 머무는 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당분간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에서 2주 넘게 시위와 유혈 진압이 이뤄지는 동안 이란 국경에서 가까운 터키예에 동부의 호반 휴양도시 ‘반’에 이란의 엘리트 계급 인사들이 술을 마시고 모임과 파티를 하러 모여든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을 찾는 이란인들은 매우 많고, 일부는 터키예인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한다.

무지개빛 우산들로 장식된 반 시내의 한 거리에는 이란인들이 주요 고객인 가게들이 모여 있다. 카페와 음식점에는 메뉴가 이란에서 흔히 쓰이는 파르시어로 적혀 있고, 페르시아식 요리도 나온다.

터키예에 거주하는 취재원들은 텔레그래프에 최근 들어 부유한 이란인들이 정치적 불안을 피하려고 터키예로 왔으며, 이 중 일부는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